

국가R&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(안)

2015. 4. 7.

관계부처 합동

< 목 차 >

I. 추진 배경 및 경과	1
II. 연구비 비리 유형 및 실태	2
III. 주요 개선과제	3
IV. 향후 계획	7

I. 추진 배경 및 경과

- 국가연구개발사업이 **범부처**(18개 부·처·청로 확산되고, 예산도 19조원에 이르는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

※ 정부R&D예산 : ('95) 2.2조원 → ('03) 6.5조원 → ('08) 11.1조원 → ('15) 18.9조원

- 그러나, 연구비 집행 등의 부분에서 발생하는 비리문제는 **R&D사업의 효율성을 저해**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
- 정부의 비리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존하는 비리는 성실한 연구자까지 매도하고 **R&D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**

⇒ 범부처 협력을 통해 R&D분야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**비리방지 대책**을 마련하여 **국가재정 누수방지** 및 **국민 신뢰 회복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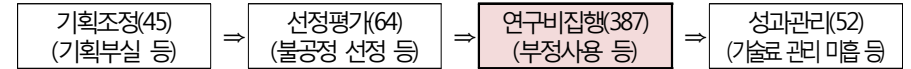
【 추진 경과 】

- (미래부) ◆ '부패척결 및 소통강화 합동 워크숍'('14.8월)
- R&D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논의
- ◆ 'R&D분야 부패방지 제도개선(안) 설명회'('14.10월)
- 대학, 출연연, 기업, 전문기관 등 연구현장 대상 의견수렴
- (산업부) ◆ 'R&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' 발표('14.8월)
- (부패척결추진단) ◆ '정부합동 T/F' 구성·운영('14.9~12월)
- 부패척결추진단 주도로 미래부, 산업부, 기재부, 국세청, 관세청 및 R&D 전담 5개 기관이 협업, 실태조사 및 비리 근절대책 추진
- (유관부처) ◆ '비리방지 대책 T/F' 구성·운영('14.11~12월)
- 국조실, 미래부, 산업부, 교육부 등 R&D 수행부처가 자체 협업, 구체적인 제도개선 대책 협의

II. 연구비 비리 유형 및 실태

- (유형) 지난 5년간('08~'12) 감사원의 감사 결과 총 548건의 비리가 지적

- 부정사용 및 관리부실 등 연구비 집행단계에서 387건 부적정 사례 지적



⇒ 언론에 보도되는 중대 비리는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주로 발생

- 연구비 비리는 인건비 부당 집행·횡령, 목적 외 사용, 허위 서류 제출 등이 **공통유형**으로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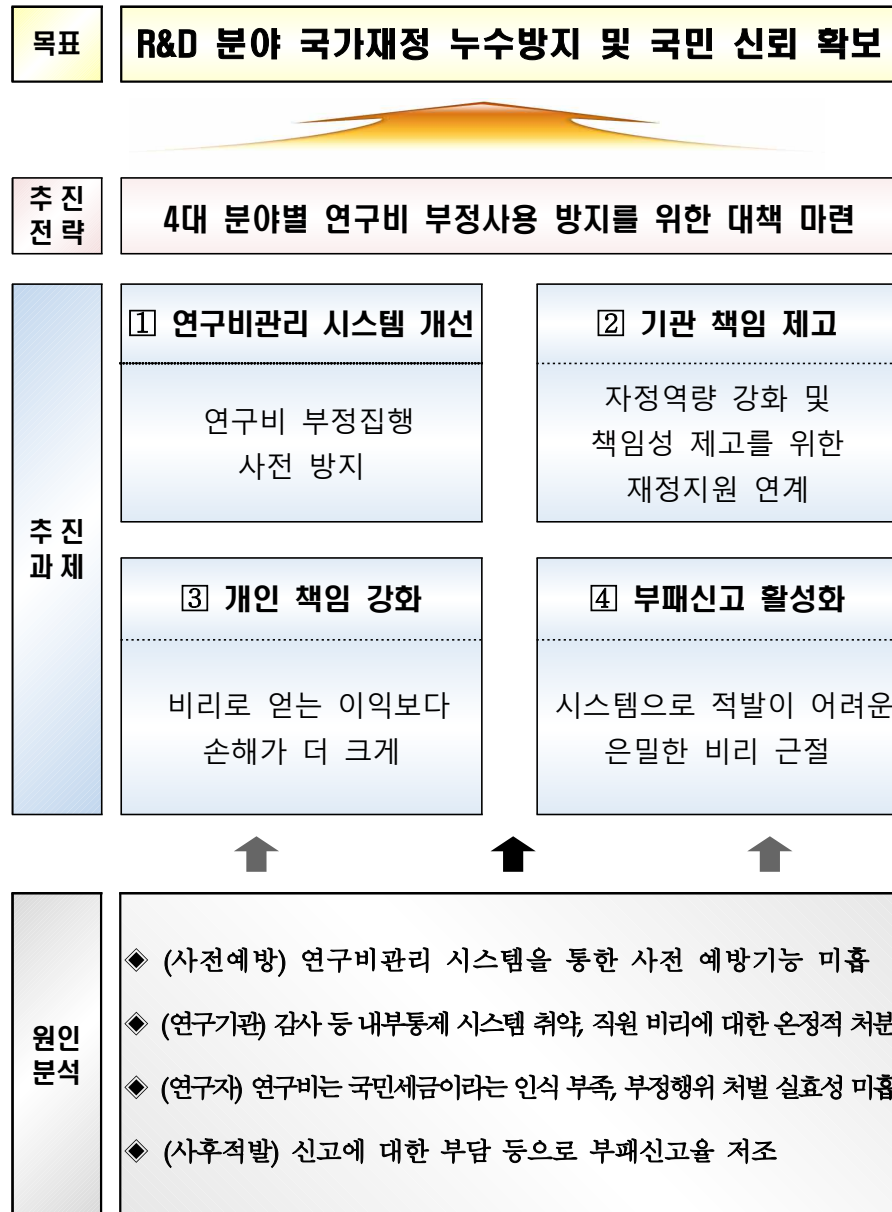
- (대학) 학생연구원 인건비 횡령, 허위 증빙서류 제출 등
ex) K대학 C교수 등은 1.2억원('09~'13)을 불법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('14.10월)
- (출연연) 위장 가맹점(유흥주점 등)에서 부정 사용, 인건비성 급여 부당 집행
ex) 14개 이공계 출연(연)에 대한 법인카드 집행실태('12.1~'13.9월) 조사결과 사적 용도로 심야·휴일 부적정 사용, 위장 가맹점 사용 등 593건(63,592천원) 지적
- (기업) 유령회사 설립·거래를 통한 연구비 유용, 회사 경영자금으로 연구비 전용, 납품기업과 공모하여 연구비 횡령
ex) N기관 K연구원은 특정업체에 하청을 주고, 유령회사를 통해 뇌물수수('14.6월)
- (공공기관) 법인카드 부정 사용, 연구장비 구매 등 허위정산
ex) S기관 B연구원은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90만원 결제하고 연구회의 사용으로 증빙('14.12월)

- (실태) 부패척결추진단은 미래부, 산업부 등과 합동으로 최근 4년간 R&D 분야(연간 예산 9.5조원)의 연구비 집행·유용 혐의 전반을 실태조사

⇒ 부패유형 심층 분석을 통해 62개 기관, 약 50억원 규모 비리 수사의뢰

- (세금계산서 사후수정)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지출증빙으로 제출 여부 전수조사 ⇨ **46개 기관, 18억원 비리 혐의 수사의뢰**
- (부실업체 조사) 연구비 유용, 부도, 폐업 등으로 과제수행이 중단된 업체의 연구비 집행실태 전수조사 ⇨ **13개 기관, 25억원 비리 혐의 수사의뢰**
- (실태점검) 특정거래처 거래집중, 거래처와의 특수관계 등 비리 의심기관 현장점검 ⇨ **3개 기관 7억원 비리 혐의 수사의뢰**

Ⅲ. 주요 개선 과제



1 연구비관리 시스템 개선

- 전문기관의 연구비관리 시스템이 폐쇄적 운영 등으로 사전예방에 한계
 - ◆ 타기관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부정징 집행 감시 강화 추진
 - ◆ 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학생인건비 유용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
 - ◆ 관리가 미흡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
- (연구비관리 시스템) 타 시스템 연계 확대 및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
 - (시스템 연계) 연구기관의 회계시스템(MIS/ERP)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출 절차 및 증빙자료 검증 강화
 - ▶ (회계시스템) 연구기관 회계시스템을 통해 적절한 집행절차 및 증빙서류를 완비한 내역에 한해 집행 처리
 - ▶ (관세청) 수입장비 가격 확인을 통해 납품가 부풀리기 방지 추진
 - ▶ (신용평가기관) 기업 정보연계·분석을 통해 페이퍼컴퍼니 의심거래 등 조기 탐지
 - (모니터링) 비정상적 지출 유형에 대한 특별관리 및 사각지대 보완
 - ※ 고액거래 등 검증 항목을 확대하여 중점 관리하는 한편, 사각지대였던 계약이체에 대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(연구재단 등)
 - (거래제한 정보공유)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유사 유흥주점 업소(카페, 호프전문점 등)에 대한 정보를 전문기관이 공유하고 카드승인 제한 등 관리
- (인건비) 제재조치 및 연구원 정보 관리체계 강화
 - (학생인건비) 학생인건비 유용시에는 과기법상 최대한의 참여제한(5년)을 부과하고, 대학 스스로 적극적인 유용방지 홍보* 유도
 - * '연구비 관리체계 평가', '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인증' 등에 홍보노력 반영
 - (연구원 정보관리) 범부처 연구과제에 대한 참여연구원 정보를 통합 관리*하여 초과지급 등 인건비 유용 방지
 - * NTIS의 참여연구원 정보 등록률(현재 43%)을 제고하고 인건비 지급·관리와 연계
- (법인카드) 연구비뿐만 아니라 기관 법인카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체계 구축
 - ※ 연구기관(감사실)이 법인카드 상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를 실시하고, 연구회(국과연, 경사연)또는 소관부처(직할기관)가 시정조치 실적 점검

2 기관 책임 제고

- 소속 연구자를 가장 잘 아는 **직접 관리주체**로서 연구기관의 **자정역량** 중요
 - ◆ 기관 자체적인 **내부통제**를 강화하고 비리행위자에 대한 **내부징계** 강화
 - ◆ 비리발생시 **간접비** 등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하여 책임성 제고
 - ◆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**연구비 사용 교육 강화**

□ (내부통제 강화) 자체감사, 내부징계 등 기관 스스로의 자정기능 강화

- (부패방지시책 평가) 각 부처는 산하기관의 **부패방지활동에 대한 평가를 활성화**하여 자정기능 강화 유도

※ 자체감사 활동 및 처벌, 행정절차 투명성,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, 반부패 자율시책 등에 대해 평가하고, 미흡기관은 익년도 감사·공직기강 점검 대상기관으로 우선 선정

- (자체감사) 출연연의 자체감사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해 **감사인력*** 및 **교육 강화, 외부 지원**** 체계 구축 추진

* 감사 대상인원 대비 감사인력 비율을 감사원 평가기준인 0.8% 이상 충족

** 회계사, 세무사 등 외부 감사인력 Pool 확대

- (내부징계) 소속 직원에 대한 온정적 대처를 타파하여 **내부 징계 기준 강화**

- (대학) 연구비 부정사용 관련 **징계항목 신설**(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 개정)

- (출연연) 공무원에 준하는 연구기관 임직원 **징계 시스템***을 구축

* 징계양정기준 강화, 부패행위자 징계감경 금지, 징계위 구성시 외부인사 참여 의무화, 의무적 형사고발 대상 확대, 부패행위자 불이익(승급제한 등) 장치 마련 등

□ (간접비 연계) 참여제한 대상기관의 간접비 고시율 대폭 감율(최대 -5%p)

* 현재 참여제한 유형별로 위반건수 및 가중치를 반영하여 최대 2.8%p 감율 적용

-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에 따라 간접비에 **가·감율 적용**(+2%p ~ -2%p)

- 추가로 실지급 간접비를 간접비 고시율과 연계하여 감율 실효성 제고

※ 실제 간접비를 고시율 보다 낮은 수준에서 일괄 지급할 경우 간접비 감율 효과가 없으므로, 우선 실지급 간접비를 고시율과 연동토록 하고 향후 고시율에 따른 정률지급 추진

□ (교육 활성화) 연구자에 대한 비리방지 및 연구비 사용교육 이수 유도

- 연구협약(신규과제)시 연구책임자의 교육이수증 첨부 의무화 검토

※ 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교육, 대학 산단 등의 자체 교육과정 활성화 추진

3 개인 책임 강화

- 낮은 수준의 제재조치로 인해 **반복적 부정행위 발생** 및 **경각심 부족**

- ◆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**일벌백계**로 엄중 조치
- ◆ 범부처간 **제재조치 정보를 공유·활용**하여 실효성 제고

□ (제재조치 강화) 제재부가금 부과, 참여제한 조치 강화 등 추진

- (제재부가금) 제재부가금(부정사용액의 5배 이내) 부과·징수를 본격 시행하고, 인문·사회 등 **학술연구분야에도 제재부가금 신설** 추진

※ 과기법 개정('14.5월) 및 공동관리규정 개정('14.11월)으로 제재부가금 법적근거 확보

- (참여제한) 2회 참여제한 시 **가중 처벌*** 및 **삼진아웃제**** 등 도입 추진

◆ 전체 참여제한 연구자 대비 2회 이상 참여제한 연구자 비율 : 22.8%(08~14.9월)

* 2번째 참여제한을 받을 경우 50%를 가중하여 참여제한 처분

** 3번째 참여제한을 받을 경우 사유·정도에 관계없이 10년간 국가R&D사업 참여제한

- 추가로 **사업비 환수금 미납 시 국가R&D 참여제한 도입** 추진

□ (실효성 제고) 참여제한, 사업비 환수금, 제재부가금 등 제재조치 정보를 범부처가 공동 활용

◆ 참여제한 조치후 NTIS에 미등록한 사례 총 656건('09~'13년)을 비롯하여 환수금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악의적 미납자에 대한 확인 불가

- 과제신청·협약시 참여제한 여부 등을 확인토록 전문기관 시스템 개선

- 미납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징수 절차, 참여제한 정보 확인 시점 명확화 등 **제재 관련 공동 활용 기준 마련**

4 부패 신고 활성화

- 은밀한 비리행위 적발은 **신고가 필수적**이나 **심리적 부담**으로 활성화 한계

- ◆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자의 **접근성** 및 **편의성** 제고

□ (신고창구) 각 부처 및 전문기관에 부패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권익위와 연계

◆ 권익위가 R&D를 포함한 전반적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, 관련법규상 권익위에 직접 신고한 건에 대해서만 보상·포상이 가능

- R&D 현장에서 **심리적 접근이 용이**한 신고창구를 활성화 하여, 웹페이지 링크 등을 통해 **권익위에 신고**토록 유도

IV. 향후 계획

☐ 각 과제별로 소관 부처 주도하에 즉시 추진(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)

《 추진과제별 주관부처 》

구분	주요과제	주관부처	일정
①연구비 관리 시스템 개선	o 자체 회계시스템, 카드사, 국세청 등 연계	미래부, 산업부	~'15상
	o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	미래부, 산업부	~'15상
	o 유흥주점 등 거래제한 정보 공유	미래부	'15상~
	o 학생인건비 유용 방지	미래부	~'15상
	o 참여연구원 정보관리 강화	미래부	~'15하
	o 법인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	미래부, 국조실	~'15하
②기관 책임 제고	o 부패방지시책 평가 강화	미래부	'15상~
	o 출연연 자체 감사 강화	미래부	~'15하
	o 내부 징계 강화(대학, 출연연 등)	미래부, 교육부, 국조실	~'15하
	o 간접비 등 정부 재정지원 연계	미래부	~'15하
	o 연구비 사용 교육 활성화	미래부	~'15상
③개인 책임 강화	o 제재부가금 본격 시행	미래부, 산업부	'15상~
	o 인문·사회분야 제재부가금 도입*	교육부	~'15하
	o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강화*	미래부	~'15하
	o 제재정보 공유 등 실효성 제고	미래부	~'15하
④부패 신고 활성화	o 부패신고창구 개설 및 권익위 연계	미래부	~'15상

* 법률개정이 수반되는 과제로 일정변동 가능

☐ (이행관리) 과제별 추진사항 지속 관리·모니터링

○ 정기적으로 과제 이행실적 관리·점검('15년 이후 반기별)

※ 범부처 연구제도협의회(공동관리규정) 등을 활용하여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